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선고가 엇갈리게 내려져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2년 1월 당시 서울남부지원의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권위 역시 이미 설립 초기부터 수 차례에 걸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진정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인권위가 수감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과 같은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뤄오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입장 표명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견 제출 및 정책 권고를 요청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인권정책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 측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더 못거릴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의 논리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인권위는 인권의 논리로 입장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명득 인권정책국장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1항과 제28조 1항은 인권위가 시정 권고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심리를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나 여전히 신중을 기하며 아무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있는 인권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계류중인 2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위해 75명의 변호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지원에 나섰다.

<기사 처음으로>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독일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등을 대표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를 만나 송두율 교수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슐츠 씨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링하고 송 교수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슐츠 씨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독일 법률가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방문 목적을 밝혀달라

▶ 송 교수의 항소심 재판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왔다. 이번 방문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금요일 출국해서 2주 후 다시 한국에 올 예정이다.

·2심 공판을 본 소감은 어떤가?

▶ 마치 중세 마녀재판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법정 풍경은 독일과 다를 바 없는 데 이상한 점은 송 교수가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의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처벌하려 하는데 그게 이유가 되느냐? 어떤 학문적 성과를 냈느냐가 더 중요하다. 송 교수가 복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를 문제시한다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성과를 이룬) 지난 100년간 모든 저서나 학문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송 교수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미달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한국정부 또는 일부 정치계에서 송 교수의 업적에 대해 불편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양심적인 학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면서 아직 한국이 민주화되고 법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항소심에서 시대착오적인 1심 판결이 정정되기를 바란다.

·국가보안법에서 송교수 사건 관련해 특히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 제일 큰 문제는 학문적 성과를 죄로 취급하는 것이다. 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대적인 인권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의견이 틀린 것에 반박할 수 있으나 의견 그 자체에 대해 형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독일 국적으로 독일에서 살아온 송 교수에게 잠입 탈출을 적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것을 어떻게 탈출이라고 할 수 있겠나? 또 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송 교수 한사람의 저술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 받았다면 그 나라의 안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남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독일도 분단의 경험이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유사한 법이 있었나?

▶ 비슷한 법은 있었다. 특정사람들이 이적행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통일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금은 인정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

주민등록법의 역사,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를 비판했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오랜 산고 끝에 '열린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 일시: 6월 18일 밤 11시 20분
- 채널: KBS 제1 TV
- 프로그램 명 : 열린 채널
- 감독: 이마리오(서울영상집단)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18일 (금)
제 25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안 하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예요"
2.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3.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4.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5.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예요"

고등학생,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강요하는 예배. 싫어, 싫어" "학생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17일 오후 6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였다.

"그냥 설교시간에 즐기고 말지. 딴 짓 하지 뭐" 하면서 익숙해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고3이 되면서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됐어요." 대광고등학교 3학년 강의석 학생은 16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계 학교인 대광고에서는 전교생이 매주 한 시간씩 예배를 보고, 이 시간에 학생들은 개개인의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 참석하여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들으며, '주기도 송'을 불러야 한다. 더욱이 매일 아침마다 각 학급에서는 10분 정도 예배를 보는 도중 '기도순서'를 번호순으로 하기 때문에 비기독교인 학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강의석 학생은 "1학년 때는 음악시간에 수행평가로 주기도 송을 외운 적도 있다"며 학생평가에서도 학교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강의석 학생은 "연말에는 반별 성가합창대회가 있다. 그런데 반별 대회니까 개인이 빠진다고 하면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빠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며 그간의 갈등을 토로했다.

강의석 학생이 16일 교내 방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 보장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학교측에서는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이다. 방송을 들은 기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18일 징계위원회를 잡아 놓고 있다. 강의석 학생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최소한 원수도 아닌 타종교 신도 정도는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종교의식을 강요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학교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은 구분되어야 하고 학교를 선택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종교의식'은 학생의 선택권으로 남겨져야 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학교를 일방적으로 배정 받는 상황에서는 마땅히 학생에게 종교의식과 종교교육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들이 1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2.6% 인상한 58만1천950원(시급 2,575원)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시민사회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민주·한국노총,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 앞에서 경총의 최저임금인상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재숙 '청소용역 고등법원'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받고는 생활이 안 돼 일 끝나고 또 다른 시간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현 최저임금 57만원으로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목적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2.6% 인상안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상안'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삭감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76만 6,140원(시급 3,390원)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정부 최저임금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현 최저임금법안의 개선안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의무화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합의로 선출할 것 △적용시기를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할 것 △수습·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고용증가율 등 '국민경제생산지표'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제기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정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정규노동자 임금의 2/3로 규정하고 있는 OECD의 저임금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비정규관련 전문가,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77만원 쟁취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해 왔고, 24일~25일에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상경노숙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빈곤사회연대도 24일 문화제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감금, 폭행, 종교강요 등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한 합법화 계획을 밝히려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신고시설 지원관련 공청회'를 열고 2005년까지 잠정 확보된 로또복권 기금 849억 원과 삼성재단 기금 등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미신고시설 1096개 중 669개를 신고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공청회 주말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 업소기준에 미달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해 기존 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권문제 소지가 있었다"며 "재정지원을 통해 이들을 제도권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자격 없는 미신고시설들이 대거 신고시설로 전환해 법적 지위를 얻게될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각부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시설공대위) 박숙경 씨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 인권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단선적 가정"이라며 △5인 이하 그룹홈 등 탈시설을 지향하는 대안모형에 지원 집중 △인권문제가 발생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객관적 인입장에서 시설을 바라보고 감시할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기금에 의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예산에 의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국가의 관리책임을 강조하는 등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대다수 미신고시설은 개인소유 시설"이라며 시설 지원 후 "시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설장들은 대규모 지원을 받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로 참석한 강원도 사회복지과 최상집 사무관이 "오늘 이 자리는 로또복권 기금 덕분에 열린 셈"이라며 "좋은 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복권 대박을 맞은 것"이라고 말해 시설 관계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설공대위 활동가 10여 명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공청회장 입구에서 침묵 피켓시위를 벌여, 시설 생활인의 인권 확보에는 무관심한 채 운영자의 편에서 지원 사업을 계획한 복지부를 규탄했다.

<기사 처음으로>

권교숙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모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이라니 제목이 자못 흥미롭다. 발간사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은 "인권문제에 대한 검찰공무원들의 관심을 드높이고 나아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어놓았다. 이 바람대로 충실한 내용을 갖춘 자료집일까.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검찰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모든 수사와정에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비롯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의 수사,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지문날인 요구, 소수자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새로이 마련한 지침이나 기존 지침의 개정 계획까지 수록돼 있어 검찰 내부의 변화 움직임도 관측할 수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과 최근 법원·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결정례가 실려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을 뿐, 검찰이 준수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추려내고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국제인권기준과 판례를 관련성 있는 것끼리 다시 묶는 수고는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야 검사들이 과연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지침과 판례의 소개만으로 인권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안이한 인식이다. 교육을 통해 인권기준과 내부의 수사준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왜 술한 가혹수사가 이어지고 밤샘수사가 남용되는지, 또 왜 그렇게 피의사실은 합부로 공표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임검사들도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또다시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과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과 마주선 피해자나 참고인,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공감할 만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처럼 이 자료집은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아낌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이 될 만하다.

<기사 처음으로>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쟁기를 박다

달리를 벌기 위해 수출용 환금 작물을 재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린 배는 채우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한숨 소리, 유전자 조작 식품과 농약에 찌든 수입 과일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밥상의 풍경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지난 14일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가 주최한 식량주권 국제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세계 곡물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WTO, 세계은행을 위시로 한 국제기구들을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면서 "식량 주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국적 기업, 농민을 볼모로 삼아 이윤 추구

'남반구 포커스' 니콜라 씨는 "지난 30년 동안 농산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입증해 주듯이,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면서 농민들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국에서 온 친다 씨는 "태국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윤 증식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파와 과일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국 농민들은 실제로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을 만큼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일년에 380달러를 밀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식량주권, 생산·유통·소비 등 포괄적 개념

이날 토론회에서 식량 주권의 문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빈민을 아우르는 민중들의 건강권, 사회보장권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사안이니 만큼 부국과 초국적 자본에 대하여 식량 '안보'에 방점을 찍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민중들이 식량 주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일본에서 온 콘도 야스오 씨는 "식량주권을 생산, 유통, 소비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아 캄페시나'는 포르투갈레그레에서 열렸던 세계사회포럼에서 식량주권을 "초국적 자본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독점 침탈에 맞서 농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 즉 '시장'을 상정하여 상업용 단일 작물들에 대대한 비료를 살포

하는 녹색혁명, 어업과 낙농업의 산업화를 지칭하는 청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의 솜수에 맞서 자생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아 캄페시나' 회원 인두라 투비스 씨는 "녹색혁명은 인도네시아 농업을 '수출 산업'으로만 몰아가고, 작은 가정 단위의 토지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며 폐해를 지적했다. 더불어 "식량주권은 단지 식량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식량 공급을 위해 토지, 물, 종자까지 아우른다"고 밝혔다. 몬샌토·칼젠 등 생명공학회사가 주범인 유전자조작농산물의 문제나 종자의 확산을 저지시키려는 식량 독점의 시도 역시 식량주권의 문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유전자 조작식품 반대'에서 온 활동가는 "몬샌토 회사에서 유전자 조작 밀가루를 유통하려고 했었는데, 투쟁을 통해 유전자 조작 밀가루에 대한 연구를 중지하겠다는 발표를 사측으로부터 얻어냈다"며 그 성과를 나누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전농'은 오는 9월 10일 고 이경혜 열사 1주기를 맞아, '고 이경혜 열사 추모제 및 WTO반대 세계 식량주권 쟁취 국제 행동의 날'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19일 (토)
제 25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대학, 노동자 착취의 야만을 중단하라
2. '365일 깨끗한 학교'에 가려진 노동자의 맘
3. 국방부 특조단, '업거적 자살극'
4. 자운, 맘대로 쓰지마!
5. 노숙인 당사자가 벌이는 실천으로

<논평> 대학, 노동자 착취의 야만을 중단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그들이 당하는 억압과 차별은 분노를 일으킬만큼 더 이상 낮설지는 않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호주머니를 불리는 '지성의 전당' 대학의 야만적 행위는 그 기만적 사실에 구역질마저 불러일으킨다. 고려대학교도 역한 착취의 냄새를 풍기는 수많은 '지성의 전당' 중 하나다.

고려대학교는 부끄럼 없이 말한다. 2백여 명의 청소용역 노동자의 노동조건, 그들의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용역업체 선정의 유일한 기준은 '365일 깨끗한 학교'라고. 고려대학교는 수치심도 없이 말한다. 깨끗한 학교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기만 한다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좋고, 한 노동자가 450명 이상을 청소해도 좋고, 11시간 노동을 시켜도 좋고, 그 대가로 65만원만 줘도 좋다고. 게다가 고려대학교는 뻔뻔하게 말한다.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용역업체 소관이지 학교와는 상관 없다고.

고려대학교는 지난 99년 직영노동자였던 청소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둔갑시켰다. 대학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노동자에게 이중의 착취로 다가오고, 매년 해고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 비단 고려대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 대학들은 학교가 문닫지 않는 한 필수 불가결한 청소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교육의 목적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라고 선언했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목적 또한 인권존중에 있어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학들에게 묻는다. 청소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인권존중이 양립할 수 있는가? 오히려 사회의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대학의 책임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착취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사회부문을 선도하는 것이다. 지금 대학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과 변화이다. 교수와 대학당국은 노동법과 인권,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강의실에서 맘을 흠뻑 흘리며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해야 한다.

고려대학교는 대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에 대리석을 깔 것이 아니라 먼저 청소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365일 깨끗한 학교'에 가려진 노동자의 맘

고려대 학생·사회단체,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불안·노동조건 개선 촉구

최근 고려대가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계기로 노동형태를 시간제·교대제로 바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려고 시도하자, 고대 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대학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자"는 목소리를 모았다.<관련기사 2004년 6월 9일자 참조>

18일 고대 학생모임 '불철주야'와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고대본관 앞에서 학교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용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용역업체 책임으로 돌렸던 학교측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다.

사회진보연대 이종훈 노동국장은 "애초에 정규적이었던 대학시설관리 노동자들이 IMF 이후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것은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려는 대학 당국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씨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과 노동강도 완화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권리"라며 "이를 달성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허울뿐인 용역업체가 아니라 '365일 깨끗한 학교'를 입찰조건으로 내세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고대 경영대 E반 반대표 홍명교 씨는 "가족이 있는 노동자가 한 달에 56만원으로 어떻게 사느냐?"며 "고대 어음대 총장은 같은 나이 또래인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 씨는 어 총장이 경영대 교수임을 상기시키며 "자칭 CEO 총장답게 인간보다 이윤이 우선인가 보다"라고 비교했다.

집회를 마친 후 학생과 사회단체 대표 4명은 고대 본관에서 학교 측 관계자와 면담하고 교대제·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 철회를 요구했다. 또 용역업체 선정 기준으로 △고용승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임금 △정소인력 증원으로 노동자 1인당 청소구역 축소 △연월차·생리휴가와 여름·겨울방학 휴가 △학기별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근본원인이 '용역고용'이라고 지적하며 직접고용 계획 마련을 위해 학생·노동자·학교당국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를 마치고 본관 안으로 진입한 학생과 사회단체 활동가 60여 명은 면담장소 밖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면담은 애초 요구했던 총장 대신 총무부장·총무과장과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요구안에 대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기사 처음으로>

국방부 특조단, '엽기적 자살극'

의문사위, "허원근 사체는 이동된 것" 이라고 밝혀

"이 사진을 상급자에게 보여주며 자살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웃을 것이다" 현병대 기록상의 허원근 일병 사망사진을 확인한 미국 LA경찰 살인사건 전문가의 말이다.

'허 일병이 M-16 개머리판을 지지대 삼아 앉은 자세에서 우측가슴을 쏘아 찢어낸 다음 다시 일어나 앉아 좌측가슴을 쏘아 찢어낸 후 또 다시 일어나 앉아 탄띠를 풀러 왼쪽 다리에 얹은 다음 비스듬히 누워 머리에 한 발 발사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2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의 재현 비디오가 1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기자회견에서 상영되자 참석자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의문사위는 84년 4월 군에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허원근 일병에 대한 조사 중간보고에서 △발포된 총기는 허 일병의 총기라고 볼 수 없고 △현병대 기록상의 현장 사망현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의문사위는 새로 발견된 사망현장 사진 2장을 공개하고 특조단 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이 2장의 사진이 입수경위 조차 없이 첨부되었다며 국방부가 특조단 자료를 아직까지도 일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리부근 혈흔 발견할 수 없어

의문사위는 "특조단의 현장 재현이 사실에 가깝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총구 등에 혈흔과 땅에 지지하고 있던 개머리판에 흙이 묻어있어야 하지만, 현장사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현병대 기록에는 "사망자의 두부 좌견방 30센티에서 1미터 일대에 골편이 산재해 있고, 사체 위 부분 50센티 상당 지면에 폭 40센티×80센티 정도의 뇌실질물이 배산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병대 수사기록 상의 사진에서는 혈흔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의문사위는 머리 총상으로 혈흔이 남자한 참고 사진을 보여주며 "두부 총상으로 사망한 경우 혈흔이 주변에 다량 발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허 일병의 사망 현장 사진에서 골편 등 뇌조직이나 혈흔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현병대 기록상의 사망장소가 실제 사망장소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전문가들 '사체는 이동된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뉴욕 경찰과 LA경찰의 현장감식 전문가, 총기전문가, 검시관 등이 허 일병 사망사건 관련 현병대 기록 사진에 대한 의견을 밝힌 비디오 테일이 공개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사체 주위에 혈흔이 없는 점, 총구에 혈흔이나 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체가 이동된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 의뢰한 허 일병 총기의 총빈 수정대

이날 의문사위는 사건 당시 현병대가 육군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며 작성한 '감정용 증거품 송부증'과 육군과학수사연구소에 기록된 '접수 발송대장'에서 허 일병

의 "총변"이 수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관련자들의 총변중 일부도 수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허 일병의 총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수정되었다는 것은 감정의리 된 총기가 허 일병의 총기가 아닐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화약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표된 총기와 허 일병의 총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2기 의문사위가 아직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허 일병 사망사건이 타살이라는 1기 의문사위의 결론을 반박하며 내놓았던 2002년 특조단의 발표가 허점 투성이었음은 이날의 발표로 여실히 드러났다.

<기사 처음으로>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템·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변조식별시스템 추진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지문날인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일단 석방하고 신체검증영장을 받아 지문을 날인 받고 있다"며 "행정자치부는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찍게 하고 지문 인식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가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행정자치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지문정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담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은행 등 민간에게도 제공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상에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에는 1999년 경찰의 불법적 지문정보이용에 대한 헌법소원, 2002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4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들의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등 지문날인과 관련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기된 헌법소원조차도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노숙인 당사자가 벌이는 실천으로

국내에서 IMF 이후 빈곤으로 인한 '홈리스', 즉 집 없이 거리에서 사는 노숙인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일본 역시 경제 붕괴에 따른 실업 노숙인들이 전체 노숙인(3만명)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숙인들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탈출구의 부재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다.

지난 14일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는 '빈곤과 홈리스'를 주제로 한일 노숙인 문제를 다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숙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노숙인 당사자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아래 전실노협) 최부식 위원장은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한국의 IMF 등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인 불황으로 인해 홈리스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며 "노숙인들은 개인의 무능력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빈곤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며,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러한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노숙인 문제의 사회성을 강조했다.

3년째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는 김학식 씨는 "21년 동안 회사 경영을 해 왔는데 IMF로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회사가 무너졌고, 빚더미를 피해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며 "익숙하지 않은 건설노동을 하다 물건을 안고 한 층을 떨어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먹을 것, 잠자는 것 하나에 목숨 걸고 살고 있다"며 자신의 생활상을 고백했다.

김 씨는 "태어날 때부터 노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민의 한 명으로서 기업 경영도 하고, 세금도 꼬박 낸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노숙인들에 대한 외면을 중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노숙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동경 스미다강 강변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이치자키 씨는 "한국과 일본에서 노숙인이 생기는 사정은 매우 유사하다"며 "일본의 노숙인들은 주거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동경에서는 이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

라고 일본의 상황을 설명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야마우치 씨는 "노숙 탈출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며 차별 받지 않고 더 나은 처지로 살 수 있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동지들이 공원에 주소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노숙인의 자립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노숙인 운동의 차이가 부각되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실노협 정은일 목사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종교시민단체들의 노숙인 운동은 애초부터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서비스 위주의 운동은 나름의 의의가 있지만 그 한계로 인해 노숙인이 주체로서 자립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이제는 노숙인 스스로 자립하여 노숙인의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당사자 운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22일 (화)
제 25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안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민은 죽어도 파병은 강행?
 2.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
 3.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4. 경찰, 성실정량원 부원장 구속
 5.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국민은 죽어도 파병은 강행?

이라크 저항세력, 한국인 인질의 생명위협...국내 파병 반대 여론 확산

정부의 추가파병이 본격화되자 이라크 한 저항세력이 한국인을 인질로 삼고 "철군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곳곳에서 우려와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새벽(한국시간) 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살고 싶다"고 애원하는 한국인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방송했다. 이 한국인은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 씨이고, 김 씨를 납치한 이라크 저항세력은 '자마아트 알 타우히드와 지하드(일신교와 성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는 지난달 11일 미국인 니콜라스 버그를 참수한 사건의 배후인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김선일 씨를 무사히 구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라크 파병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금 은 납치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게 급선무이지, 이를 파병과 연계시킬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선일 씨의 피랍 사실이 알려지면서 21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국인 석방과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하대양 한국외대 아랍어과 학생회장은 "정부는 (김선일 씨의) 무사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에 파병철회를 촉구했다.

평화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17개 인권사회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이미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돼왔던 것"이라며 "파병으로 국익을 챙기겠다는 발상은 이라크 국민뿐 아니라 한국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파병결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사회·제마부대의 즉각적인 철군과 함께 "17대 국회가 '미국과의 약속'을 이유로 이라크인과 한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파병반대국민행동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테러의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 파병 자체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재고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파병 철회만이 김선일 씨의 무사귀환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

제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토론회·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

"오늘은 숨어있는 날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서 축제를 즐겨요" 태풍이 북상하던 지난 19일 오후 종로일대에서 굵은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무지개' 축제가 개최됐다. 성적 소수자를 비롯하여 차별 받고 소외 받는 모든 이들의 잔치 '제5회 퀴어문화

축제-무지개 2004'가 한바탕 펼쳐진 것.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이란 주제로 시작된 개막행사에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트랜스젠더, HIV감염인, AIDS환자, 인권사회단체활동가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해 그야말로 소수자들의 '해방구'이자 '놀이공간'을 만들어냈다.

민주노동당 성적소수자를 지원하는 모임 '붉은 일반' 건명인 대표는 "성적 소수자만의 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이 나란히 손잡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퀴어문화축제가 모든 이들의 것임을 강조했다. 소설가 김연 씨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그 사랑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없는 것은 사회적 아픔"이라며 "한 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 역시 사회적 소수자로 성소수자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 참석자들은 개막행사 이후 종교에서 남인사 문화마당까지 퍼레이드를 펼쳤다. 퍼레이드 맨 선두에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커다란 '무지개' 펼침막이 앞장섰고, 그 뒤를 대형차량을 통해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퍼포먼스, 여장을 한 게이들의 춤이 이어졌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 사무국장은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불의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자"며 퍼레이드 참가자들을 독려했기도 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바디큐'라는 제목으로 스타일큐브 잔다리에 전시회를, 25일 민예총 제1강의실에서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25일부터 29일까지 아트큐브에서 영화제를 진행한다.

<기사 처음으로>

● 김중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지금부터 꼭 10년 전,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한 해가 되던 1994년에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 대표는 과거 인권문제의 청산,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법제도 정비, 그리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내지 계몽, 이 세 가지들 문민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채택해야 할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 때부터 10년이 지나, 정부의 모토도 '문민'에서 '국민'을 지나 이제 '참여'로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세 가지 기준은 지금도 유효하다.

삼청교육, 의문사, 해직언론인과 해고노동자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상태이다. 오히려 새롭게 드러나서 청산을 요구하는 과거 인권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과거청산은 '국민통합'의 이름 아래 더욱 멀어지고 있다. 10년 전 220명이었던 양심수의 숫자가 71명으로 줄었다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군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반인권적 억압법제는 어떤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여 '참여'정부 출범 후 금년 5월 13일까지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는 89명에 이른다. 더구나 참여정부 출범 후 9개월간 국가보안법 관련 법원의 판결이 100% 유죄율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보안관찰법과 사회보호법 또한 위력이 여전히 여전하고, 집시법은 완전히 집회금지법이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교조는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화되었지만, '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짓누르는 수많은 노동악법 체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들이 몇 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 얻어낸 결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바람들을 얼마나 구체적 실천으로 승화시켜낼지 여전히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나 심지어 그 존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식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에게,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행해져야 할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인권교육은 인권운동사랑방이나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많은 인권단체들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하게 또 한결같이 보장되는 사회가 도래하여 그 단체의 존립의의가 상실되는 것, 그리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자진 해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 대표가 인권운동의 장래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10년 전보다 우리 인권단체들이 담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더욱 커진 듯이 보인다.

◎김중서 님은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경찰,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감금·폭행·징벌방 운영 등으로 시설폐쇄 여론이 빚발치던 미신고 복지시설의 관리자가 구속됐다. <관련기사 2003년 11월 8일자>

20일 양평경찰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실정양원 부원장 손모 씨를 구속하고 원장 김모 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 시설에서는 △□자 모양의 감옥형 구조와 쇠창살을 설치해 탈출을 막고 △새벽 5시부터 하루 4회의 예배를 강요하며 △징벌방에 가두는가 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수급액과 보호자가 생활자에게 전달한 2,200여 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이 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은 지난해 11월 퇴소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의 기습 현장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시설공대위 김정하 활동가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미신고시설 내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하면서도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관한 행정부처가 폐쇄조치 등 행정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1. 진실규명, 멈출 수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모의실험 실험 결과 장준하 씨가 추락사하지 않았다고 결론(6.14)/ 의문사위, 군 북부 중 변사체로 발견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총기번호 조작 단서 등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자살로 조작·은폐한 것'이라는 의문사위 1기의 주장에 근거 제시(6.18)

2.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대법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촉구/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예버하르트 슬츠 방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송 교수의 2심 공판 지원계획 밝혀(6.14)/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 촉구(6.16)

3. 기타

고등학생,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라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벌여/ 행자부의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에 정보인권단체 즉각적인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58만원 최저임금안에 "인상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항의집회(6.18)/ 레미콘 운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노동자 7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3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6.20)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23일 (수)

제 25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속보> 피랍된 김선일 씨 사망
2.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3.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나?
4. 그들만의 '파병' 이유

<속보> 피랍된 김선일 씨 사망

이라크 저항세력에 인질로 잡혀 있던 김선일 씨가 사망했다는 비보가 23일 새벽 전해졌다. 외교통신부는 22일 밤 김 씨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했던 이라크 저항세력은 한국 정부의 '파병 원칙 강행' 방침이 발표되자 결국 김선일 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파병 철회만이 김선일 씨를 구할 수 있다'는 김 씨 가족과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난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처음으로>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국민의 의견수렴이 거의 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 정당들조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2일 낮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아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가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아래 범국민교육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가·장려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학에서 초중등까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전면 허용 △국내교육관련법 적용 배제, 등록금·학생선발·교원임용 등 자율적 운영권 부여 △설립·운영 등의 규제 대폭 완화 △재정 지원·부지 공여·세금 공제 등 설립 촉진을 위한 각종 혜택 △국내학교와 동일한 학력인정 등을 담고 있다.

범국민교육연대 강내희 연구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조항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한국 공교육을 순식간에 야수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악법"이라며 "전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 문제는 전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 대다수에게 특별법의 정확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인천 송도, 용산, 수원 등에 외국교육기관 설립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강 연구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초법적인 권리 인정으로 정부가 스스로 교육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면서도 '결산상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영리추구도 모자라 '재정지원'까지 명문화하고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따졌다. 또 "100% 내국인 학생만으로 운영되는 것만이 배제될 뿐 사실상 내국인 학교인 점, 주당 1시간 한국어·한국사 이수로 국내 학력을 인정하며 그와 관련 대학입시 특혜가 우려되는 점 등 국내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이 지적되었다."

전교조 이미숙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하며 "송도에 등록금 최소 2천 만원대의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서면 지금 인천에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외국교육기관 도입은 지금 위험받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이 단숨에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낮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교육주권 매각음모 저지·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전면 폐기를 위한 긴급구단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강영만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부모님 등골을 휘게 하는 등록금 2천 만원의 귀족학교를 만들게 할 수 없다"며 법안 반대를 외쳤다.

<기사 처음으로>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나?

전국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과 미아부모에 이어 신원확인이 안된 변사체까지 유전자를 채취하여 유전자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를 구축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등과 함께 'DNA 활용 미아찾기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찰청은 미아찾기 관련 법안들을 비교·검토하면서 경찰청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의 예방·발견·추적조사·안전한 귀가를 전담하는 기구(실종아동찾기센터)를 경찰청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 뒤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아동의 발견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얻어진 유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활용할 수 있게"했다. 이를 위해 "시설보호 운영자는 수용자들의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보호시설에서 무연고아동 및 장애 미아의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여 그 대상자로 △보호시설 내 수용된 18세 미만의 무연고아동 △보호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중 무연고자 △시체 또는 의식불명자에 대하여 개인식별을 해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는 경찰청의 전담기구 관할과 유전자디비 구축에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미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초등수사 단계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효율성을 앞세워 전담기구를 경찰청에 두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간사는 "장기미아의 경우 유전정보를 통해 부모를 찾아주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이 준비하고 있는 법률에서처럼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제·의무화하고, 이러한 유전정보에 기초해 디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유전 정보는 장기미아의 경우 기존의 신원질차로 도저히 분별되지 않을 때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취·활용되어야 하고,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디비로 장기 저장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많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만 유전자를 채취해서 장기적으로 디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들에 대한 차별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월부터 미아 찾기 운동을 벌이면서, 시설수용 아동과 미아 부모들의 유전자디비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장기미아'의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무연고 아동 전체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부당하다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경찰청은 불과 두 달 사이에 3,143명의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과 5,672명의 무연고 정신장애인의 유전자 샘플 채취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관련 법령의 제정 필요성 △유전자 시료채취 및 활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지적해 왔다.

한편, 미아가족들은 그 동안 미아관련 법령이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미아가족 박혜숙 씨는 "관련 법안이 16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로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여전한 만큼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넘는 특별법의 형태로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아찾기'의 또 다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참석하지 않아 미아찾기를 위한 정부간 공조체제나 협조관계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기사 처음으로>

그들만의 '파병' 이유

파병철회 불가 역설하는 조·중·동 사설 되짚기

김선일 씨의 피랍으로 거세게 일던 파병 반대 목소리가 김 씨의 죽음으로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 철회 불가'를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다.

언론의 '이라크 국민 살리기'

22일자 <조선일보>는 '인질사건에 치밀하고 성숙한 대처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돕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선의와 파병 목적을 이라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은 미국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팔투자에서 학살당한 이라크인과 이라크 포로에게 가해진 잔혹한 고문과 학대도 그세 있고 '선한 목적으로 가진 한국 군'이 미국의 동맹군으로 이라크에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만 명 이상 목숨을 잃은 이라크 민간인과 세계를 경악시킨 고문도 안중에 없고 이로 인한 이라크인의 적대감정도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선한 뜻'만 우기고 있을 따름이다. 경제봉쇄를 시작으로 10여 년의 역사 속에 빚어진 '이라크 민중의 아픔'에 대한 인식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지난 1년 간의 단기적 상황만 파악해도 '파병이 선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파병이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일'이라는 주장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같다.

절대 굴하지 않는 천박한 '국익론'

<조선>은 또 친절하게도 파병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정신이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어떤 희생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예 추가 파병 자체를 생각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추가파병을 결정한 이상, 이런 희생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이라크를 돕기 위한 파병이라는 <조선>의 강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인 김선일 씨를 희생하면서 이라크민중을 돕자'는 주장이 된다. 자국민을 희생하면서 남의 나라국민을 살리자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정부에 강권하고 있는 <조선>의 의도가 자못 궁극하다. 이에 반해 <중앙>의 사실은 노골적으로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은 '인질극은 국제적 분노 살뿐이다'는 사실에서 예정대로 파병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종합적 국익을 높이고 한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존심'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칼 뿐이다.

첫 단추가 잘못 됐다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을 찾는 이들 사실의 분석은 자못 흥미롭다. 이후 테러위협까지 운운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조선>은 '한국군의 선의를 이라크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중앙>은 정부의 '자국민 보호대책'의 미흡함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파병과 추가파병의 결정'이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의 근원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한국군에 대한 홍보 부족' '자국민 보호대책 미흡' 등의 근시안적 인식만을 늘어놓으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론을 대변해야 하는 언론이 정작 여론을 등지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와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24일 (목)

제 26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한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더 이상의 희생을 막자" 파병반대 절규
2.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3.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더 이상의 희생을 막자" 파병반대 절규

'한심한 정부'에 빗발치는 비난, 증폭되는 의혹

정부의 '파병 철회 불가' 방침에 김선일 씨가 끝내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피살당하자 무책임한 정부를 비난하며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김 씨의 피살 소식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능력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파병 철회' 흐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국민행동은 "이라크 무장단체의 김선일 씨 납치살해는 명백히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한데 이어 "김 씨는 조국을 향해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방침을 고수하면서) 그를 버렸다"라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20여 개 인권사회단체들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파병정책에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정부를 향해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해위험에 처했는데도 정부가 추가파병 방침을 밝혀 죽게 했다"며 "시신을 외교통상부 건물에 묻겠다"고 절규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은 23일 오전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정부의 파병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정부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아보려는 각계 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오지부동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결코 테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파병 강행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파병은) 이라크의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은근한 협박'과 풀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속보이는 감사 인사'에 대한 화답인 것.

이에 한술 더 떠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간 목적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확대 △에너지 질서의 재편 △대테러작전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이라며 "(이 중) 에너지 질서 재편이 가장 중요하고...미국 주도의 에너지 질서 재편에 우리가 끼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끝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과 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실토하며 파병 강행의 근거를 밝힌 셈. 게다가 정부는 파병이 이라크의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김 씨를 살해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첫 번째 요구조건은 '서희·계마부대의 철수'였다.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혹

이번 사건에서는 △피랍 날짜가 언제인가 △정부와 미군은 피랍 사실을 언제 알게 됐나 △미군이 미리 알았다면 왜 한국에 통보를 안했는가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정부조차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김천호 씨의 번복에 대해 "김 사장이 알자지라에 비디오가 공개된 충격으로 대사관에 정확한 실명을 할 수 없었다며 사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김선일 씨의 피랍사실 은폐의 모든 책임을 김천호 씨에게 지우며 '정부와 미군의 책임·한미동맹관계의 문제' 등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퍼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폐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정부와 미군의 '김 씨 피랍 사실 인지 시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민행동은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 △26일 범국민추모대회 △검은 리본 달기 △파병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 걸기 등을 통해 '파병 철회'에 함께 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정부가 파병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이라크 파병철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여개 인권단체는 정부의 파병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김창국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김창국 위원장에게 "이번 사태는 매우 중요한 인권현안에 대해 국가의 인권 원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인권위가 파병 및 철군에 대해 인권적인 시각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기택 변호사도 "김선일 씨 사망은 민간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정부의 정책이 민간인을 희생시킨 '정책살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에 빠지려하는 지금,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행정부, 입법부 등에 파병철회의 입장을 전달하여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양국민에 대한 학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국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반대하지만 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합의 기구이므로 통일된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인권위법을 들어 파병 사안은 인권위의 권한을 넘는다고 견제를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며 예산 삭감의 위험도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법 조항을 문제삼는 것은 인권위법과 권한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는 게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인권위가 반인권적 전쟁과 파병에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인권위는 파병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기구가 아니냐"며 "예산 걱정이나 사소한 법 권한 규정을 넘어서 파병 철회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것을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이라크 침략 당시 정부와 국회에 '이라크 전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권위의 입장이 '파병반대'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에 '신중히 판단할 것'을 지적하면서 '파병반대'로 입장이 이해됐다. 그러나 독립적 국가기구인 인권위에 대한 정치권의 몰이해로 여야의 비난에 시달리면서 실제로 한 국군의 파병이나 이라크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인권위는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기사 처음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가? 외국인력 수급정책에 따라 필요하면 '손님'으로 맞이하고, 필요 없으면 추방시켜 버리는 '소모품'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정주'한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이주노동자와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확대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산의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웅 목사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거"이라며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시민권의 개념이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실천운동 △지역사회 내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정치적 접근과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간' 정정훈 변호사도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며 이것을 법적인 권리로 말하자면 '영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한 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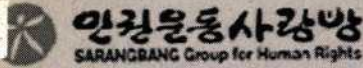
해 나갈 수 있도록 영주권 제도를 완화하는 것과 현재 단기순환정책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력 수급정책이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이규홍 사무관은 "국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외국 전문인력은 흡수·통합하되, 단순인력에 대해 단기순환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최현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데 무슨 이유로 이들을 몰아내려는지 근거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그 동안 법무부가 추진했던 '강제추방'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25일 (금)
제 26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2. 김선일 씨 추모 목요일집회, '파병철회' 촉구
3.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4. <클릭! 인권정보자료>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 여성·피해자 관점 질의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험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이른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여성의 전화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무고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과 현행 수사·재판 등의 문제를 짚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여성의 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때, 수사과정과 사법절차 속에서 겪게 될 고통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상담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수사·사법기관이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의심은 피해자에게 '왜 사건발생 직후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탈출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는지' 기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혼란과 상처로 위축된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 성폭력 사실의 입증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피해자실의 진실성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무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강간죄 구성요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원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간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는 모순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인정하면서 강간죄 구성은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협과 폭행이 있었는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무고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 고소가 역으로 무고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할 것 △형법상의 강간죄 규정 재검토 △남성의 시각이 아니라 여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변호사 역시 '사회통념'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공판에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무고'의 위험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폭력특별법,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김선일 씨 추모 목요일집회, '파병철회' 촉구

사회 각계, 정부 규탄·파병철회 물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전쟁을 끝내는 일뿐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들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민간협 어머니들이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파병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24일 20여개 인권단체가 함께 한 민가협 목요일집회는 고 김선일 추모 집회로 진행됐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테러 세력은 파병하지 않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 것은 '흔들림 없이 파병하겠다'고 되뇌인 것밖에 없습니 다. 그들이 김선일 씨의 목숨에 대해 생각이나 했습니까?"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어느 나라 민중이 침략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겠 는가. 재건을 위해 파병한다지만 미국의 동맹국으로 가는 것이며 이라크 민중에게는 점령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나라는 더 이상 명분없는 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하고 "김 선일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은 파병을 철회하고, 이라크를 도울 것이 있다면 군대가 아니라 나중에 민간인 힘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 부를 비판했다.

한편, 김선일 씨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무책임함이 언론 보도를 통해 연이어 드러나자 시민들과 사회 각계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9일부터 조합원 10만명이 참여하는 '파병철회 요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항공연대는 "미국이 이끄는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조 종사 노조원들은 파병군을 이라크로 실어 나르는 비행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도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을 방문해 "여야 의원 50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라크파병반대미상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과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기사 처음으로>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25일 최저임금결정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

#1.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김정호 위원장

"나이가 50살이 넘는 영세사업장 미성사 아주머니들은 하루에 12~13시간 일을 하고 도 기본급 37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3~4일 야근을 해야 겨우 58만원을 손에 겁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포괄 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2.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연건지부 심우택 지부장

"서울대 미화원의 임금은 52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IMF를 거치면서 45만원이 되었 습니다. 노동자들은 업체에서 시키는대로 하기만 했고, 근로기준법도 몰랐습니다. 하 지만 임금이 계속 깎이기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노조를 설립하고 43일 동안 파 업을 했습니다. 결국 상여금과 퇴직금, 연월차 휴가를 받아냈지만 여전히 미화원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3. 서울여성노조 지하철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 이덕순 지부장

"땀 뺀지 일하면서 인간다운 것을 포기하고 살아온 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IMF 지나 면서 임금이 깎였습니다. 왜 경제가 어렵다고 저임금 노동자만 책임지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일 아닙니까? 이제 인간다운 삶 을 살아보겠다고 최저임금을 77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금이 오르면 고 우리가 사치라도 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인간답게 살길 원할 뿐입니다"

저임금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 다. 24일 노동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은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행사 를 진행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 에 2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이들에게 생존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올해가 최저생계비 제4년인데다가 최저임금 결정일인 25일이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77만원'을 요구하며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공동 투쟁을 전개해 왔다.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민주노총 등은 "최저임금 56만원, 최저생계비 36만원으로 는 살 수 없다"를 내걸고 대전, 천안, 수원, 인천, 서울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며 릴레이 문화한마당을 진행했다. 문화한마당에서 진행된 마당극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 해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24일 저녁 6시부터 '부의 상징'인 압구정동에서 행진을 시작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문화제가 진행되었고 노숙농성을 벌이며 '최저임금 77만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300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불러올 '최저임 금 77만원' 요구가 올해에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 다.

<기사 처음으로>

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펴낸 곳: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89쪽/
2004년 6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실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관심과 논란이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지침서조차 없었다. 이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병역거부 선언에서 조사, 수감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병역거부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뭄 뒤 '단비' 같은 정보를 상세하게 쟁겨 준다. 병역거부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병역을 거부한 이후에는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의 불복종 행동에 따라오는 1년 6개월의 구속에 대해서도 병역거부 선언만큼이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동안 병역거부를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는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보기에 충분하다.

1장은 병역거부가 무엇이고, 인권으로 어떻게 규범화되었는지를 소개하고, 2장은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조언과 병역거부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3장은 경찰조사, 재판 등 병역거부자로서 직면하게 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과정을 쉽게 해설해 놓았다. 4장은 재판 후 교도소 수감생활에서 알아야 할 정보, 5장은 형을 마친 후의 삶의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대한 조언, 6장은 군 생활 중의 병역거부와 예비군 병역거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문의: 전쟁없는 세상(02-876-6897), 평화인권연대(02-393-9085)
www.withoutwar.org <자료실>에서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26일 (토)
제 26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우리의 '분노'는 노무현정권을 향한다
2.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3.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 침묵을 깨고 권리를 말하다
4. '강의석 학생에게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요'

<논평> 우리의 '분노'는 노무현정권을 향한다

김선일 씨의 죽음으로 온 나라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 무고한 한 생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입으로 옮기기조차 고통스럽다. 언론에 비치는 고인의 사진을 보며 또 고인의 부모를 보며 그 누가 가슴이 저미지 않겠는가. '한국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절규했던 김선일 씨를 외면하고 "변함없는 파병 원칙"만을 외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김선일 씨를 죽인 것이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다는 정부의 위선은 이미 벗겨진 지 오래다. 아무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내건 거짓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또 이를 맹무세처럼 따라하는 보수언론의 격려는 '위선의 절정', '가증스런 본색'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과 보수언론이 서로 '일치단결'해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보복과 응징'으로 선동하는 이유, 그것은 "파병"을 위한 치졸한 술책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김선일 씨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정부를 향한 '우리들의 분노'이지, 김선일 씨가 어찌되든 파병은 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정부와 보수언론, '너희들의 분노'가 아니다. 슬픔도 분노도 없는 집단들이 '보복과 응징'을 말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그들이 말하는 '보복과 응징'이 얼마나 엄청난 피의 보복을 반복하는 것인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이라크를 보라.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이 시작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1만명 이상 죽었다. 김선일 씨 피살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또 다시 이라크인들이 죽어갔고, 끝나지 않은 침략으로 이라크 전역에서 오늘도 계속 죽어가고 있다. 9.11 이후 '보복'에 쌍심지를 켜 미국과 함께, 침략군의 일원이 되어 이라크로 파병하겠다는 한국에 대해 어떤 이라크인이 '선의'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고립되어 가는 미국에게 끝까지 동맹군으로 남겠다는 한국에게 이라크인들이 대체 뭘 고마워해야 하는가. 바로 파병이 보복과 응징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의뢰병이든 공병대든 다 마찬가지다. 게다가 전투병을 보낸다면 '평화, 재건'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한국이 이라크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외국군 주둔이 이라크에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아랍연맹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전쟁의 종결선언이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아랍인들의 경고를 증명하는 지난 1년 동안 이라크 상황을 상기한다면 당장 미국의 침략 전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추가파병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서회·제마 부대 역시 철수시켜야 한다. 정부가 진정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다면 모든 점령군의 철군을 주장해야 한다. 정부는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라.

<기사 처음으로>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

올해 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국 13.1% 인상된 64만1,840원(시급 2,840원, 일급 2만2,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주44시간 노동제가 적용되는 기업 노동자는 월급으로 64만1,840원을, 7월부터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노동자는 59만3,56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영향률도 지금의 7.3%에서 8.8% 인상돼 124만5천여 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인 64만1,840원은 그 동안 노동계와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요구해왔던 76만6천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주노총,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76만 6,140원(시급 3,390원)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70~79만원 을 꼽았고, 31.5%는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76만6천원 인상안'이 여전히 적다고 답했다.

지난해 OECD의 저임금 기준인 '정규노동자 임금의 2/3 미만'에 해당되는 국내 저임금 노동자는 7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국내 최저임금액과 적용범위는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재계로 대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들은 지난 1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6% 인상한 58만1,950원(시급 2,575원)을 제시했다. <2004년 6월 18일자 인권하루소식 참고> 25일 회의에서 사용자측위원들이 10.2% 인상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결국 표결 결과 기존의 35% 인상안에서 13.1%의 수정안을 제시한 노동계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당초 민주노총의 요구에 훨씬 부족한 것이라며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에서 활동해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활동가도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자들이 병원비, 교육비 등의 부담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나 방식으로는 절대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7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 침묵을 깨고 권리를 말한다

고용승계 보장, 노동강도 강화 반대 요구 내걸고 집회 열어

25일 오후 5시, 고려대에서 최초로 학내 미화원 노동자들이 학교 당국을 상대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대학 본관 앞에 모인 110여명의 노동자들은 최근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며 노동형태를 변화(교대제 근무, 주말 근무 등)해 노동강도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학교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학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권사회단체와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미화원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서명이 담긴 공동선언서도 발표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고용승계보장과 노동강도강화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지난 21일 학교 총무처는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겠다'고 학생들에게 밝혔다. 학생단체 '불철주야' 박장준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학교측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에게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이 60세 이상인 용역 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여성노동자는 "나이는 많아도 우리는 일만 잘한다. 왜 나가라고 하는 거냐"고 항의하며 "우리가 이틀만 일을 안 하면 학교가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하더라. 나가라고 하면 다같이 빗자루 놓을 거다. 학교가 어떻게 되나 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노동형태가 변하는 것에 대해 다른 미화원 노동자는 "지금도 일 때문에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며 "그런데 이제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하려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학생들 역시 미화원 노동자들의 주말 근무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김영진(정의과 2학년) 씨는 "지금도 학교는 깨끗하다. 더군다나 현재 노동자들이 학교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를 생각하면, 주말까지 일하는 것에 찬성할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지금껏 침묵해 오던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이 드디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당당히 말하기 시작했다. 항상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학내 노동자들의 비인간적 노동조건을 모른 채 해온 고려대가 노동자들의 저항에 어떻게 답할지 28일 재계약에서 그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 처음으로>

"강의석 학생에게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 요"

1인 시위 9일째 ... 학생, 인권사회단체 지지·호응 잇달아

"처음 (1인 시위를) 시작할 때는 나 혼자 한다고 바뀔까 싶어서 망설였지만 지금은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힘이 나요"

학교의 종교 의식 강요를 반대하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9일째하고 있는 강의석 학생(대광고 3학년)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본지 2004년 6월 18일자 참고>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홀로 시작한 싸움이 지금은 강의석 학생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호응 속에서 힘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23일 학교 게시판 등에는 학교가 '강의석 학생에게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이 익명으로 나붙기도 했으며, '아름다운종교사랑'이라는 온라인 카페에는 지지의 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같은 학교 3학년임을 밝힌 전○○군은 "나, 기독교인지만 너의 행동 옳다구 생각한다구. 종교의 선택은 우리 자유"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林商沃>이라는 아이디로 올라 온 글은 "종교는, 개인의 신념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설사 강요한다 해도 그것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교를 비판했다.

이 외에도 '(가칭)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이 학교 외부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학교 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서명 작업을 벌이고 노원역, 명동역 등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의석 학생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사회단체와 학부모, 청소년 단체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학교가 헌법과 세계 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은 채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의문"이라며 "강의석 학생에 대한 징계 위협과 전학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와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29일 (화)

제 26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2.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3. <기고>촛불집회 유감, 저항을 조직화하자
4. 요지부동 대학, 성난 노동자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테러 공포를 등에 업고,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001년 처음 국정원에 의해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6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종석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선일 씨 피살사건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화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안영근 의원도 “테러방지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며 “(김선일 씨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응은 헛점이 드러났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긴급대처를 위한 것이고 대테러대책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테러대책반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안영근 의원은 현재 법안을 성안 중이며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변호사는 “정부가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탓”이라고 못박으며 “파병철회를 통해 테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실효성도 없고 인권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대테러대책반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고 해도 여전히 △불법감청을 통한 사찰 △근거 없는 계 좌추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불법사찰 △외국인과 접촉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등 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지도 못할뿐더러 국내 외국인 및 내국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은 이라크 파병이 안겨준 공포를 결국 테러방지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며 우리사회에 또 다른 공포를 유포시키고 있다. 그 공포가 우리 사회 내부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추진에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사회 각계의 '저항'이 예상된다. 근본적인 테러방지는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으로 그 출발은 파병철회 뿐이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단체, '인권의 이름으로 할 말 하라' 촉구

정부에 '생명'과 '인권'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목소리가 시급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비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오고간 이날의 간담회 이후 인권위는 '정책국에서 추가 조사하여 다시 보고'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이라크 파병 철회 입장' 발표를 요구해 온 인권단체들은 지난 23일 김창국 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어 전원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실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인권위가 “인권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에 파병철회를 권고하라”고 강력히

추구했다. 전국 30여 개 인권단체들이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인권위가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로 인한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했으며, 위원회의 권고(지난해 3월 인권위가 발표한 반전·평화·인권 선언)가 정부와 국회에 의해 무시되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비판하고 “인권 옹호를 존립의 근거로 삼는 위원회의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회의는 인권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의견서에서 △정부와 국회에 파병철폐를 권고할 것 △고 김선일 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자체 조사해 발표할 것 △파병 문제의 반인권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파병은 이라크인과 한국인 모두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인권사안”이라며 “인권문제에 있어 인권위가 정치권의 눈이 무서워 의무를 저버리고 함말을 못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기사 처음으로>

<기고>촛불집회 유감, 저항을 조직화하자

수많은 이라크인의 죽음, 김선일 씨의 죽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라질지 모를 죽음의 선동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 살육의 덩어리와 살고 싶다는 피울음이 보이고 들리는 이 때,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고, 끝도 방향도 없는 연설을 듣다가 쓰레기를 치우고 가라는 해산 명령과 함께 흩어진다.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다.

집회의 성격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당장 집회자원봉사단이라는 사람이 달려온다. 시민들이 보기에 안 좋으니 질서 있게 앉아 있으라고 한다. 경찰도 끼어 들어 대열 안으로 들어가라 한다. 경찰이 마련해준 사각틀 속에 앉전히 앉아있는 것이 질서인가? 그건 도대체 이 시기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경찰 차량과 전경으로 장막이 쳐진 테두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확성기 소리, 원래 시민단체들은 파병반대 하는 게 당연하고, 정부는 정부 방침대로 간다는 노무현 식대로 되가는 무대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이 바라는 바대로의 모양이라면, 이런 걸 우리가 예전에 광변집회라 부르지는 않았는지, 기억을 점검해보게 된다.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만 집회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아직 우리 사회라는 걸, 촛불의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다. 그 초라한 집회. 시위 권리의 위상을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유모차를 밀며 가족 단위로 나와 평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집회의 상을 보여줬다는 것,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뤘다는 것 등등 촛불집회가 이룬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보여준 성과가 그 형식성의 유지로 똑같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촛불은 정신이었지, 형식이 아니지 않은가. 지금의 촛불은 시민의 창조물을 바탕으로 계속 복제품만 찍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많은 생명이 미 제국주의와 그 하수인의 탐욕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대를 조직화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회생도 치르려하지 않는다. 전쟁을 벌이겠다는 정부를 상대로 과격해지지 말라니, 그럼 우리는 언제 과격해져야 하는가?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는 학생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쓰레기 치우고 가라는 시민의 질서외식이 강조되는 집회에는 이미 인권의 처절함이 없다.

집회. 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은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난하다. 간히고 박제화된 우리의 목소리는 저들이 추진하는 전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으니 이토록 가난할 수 있는가?

1인 시위, 평화촛불집회, 야간집회가 아닌 문화행사라는 식의 '형식'으로 더 이상 비켜가려 하지 말자. 아무런 회생도 치르려 하지 않고, 이 전쟁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꿈이다. 이 전쟁이 도모되는 자리마다 찾아가 점거하자. 이 전쟁에 찬성을 표시하는 정치인들을 쫓아가 먹살을 잡자. 인의 장막을 친 경찰선 바깥에서 파병철폐, 전쟁반대를 외치자. 그리고 답장차안에서 유치장에서 만나자.

노무현이 바라는 대로 더 이상 굴지 말자. 우리가 반대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자. [인권운동연구소 류은숙]

◎유해정의 인권이야기는 쉽니다.

<기사 처음으로>

요지부동 대학, 성난 노동자

고대 청소용역 노동자 한때 본관 점거

최근 고려대가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계기로 노동형태를 변경(시간제·교대제)하는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본관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

다.<2004년 6월 26일자 인권하루소식 참조>

28일 낮 12시 고대 본관 앞에 모인 80여 명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본관 안으로 진입해 1층 총무처 밖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28일은 학교측과 새 용역업체가 도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날. 노동자들은 그 동안 학교측이 "노동형태 변화나 저임금 문제는 용역업체 소관"이라고 떠넘기며 새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데 대해 항의하며 계약 체결 전에 노동자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점심시간이 끝나는 1시경 자진 해산했다.

이에 대해 고대 학생모임 '불췌주야' 박장준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이 학교와 용역업체가 맺는 계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왔는데도 항의 한번 할 수 없었다"며 "오늘 집회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학교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면으로 항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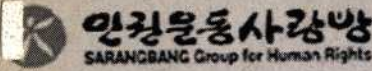
또 이날 고대 학생들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모인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 공대위(준)'는 학교측과 면담을 가지고 전원 고용승계 보장, 용역 계약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노동형태 변경 문제는 365일 깨끗한 학교를 위해 포기할 수 없고, 계약서는 학생이든 노동자에게든 절대 보여줄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다.

한편, 애초 학교측이 제시한 도급비는 지난 25일 발표되어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64만1840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적은 액수로 알려졌다. 자연계 캠퍼스 용역업체로 잠정 선정된 제이디원 관계자는 "최저임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 현재 입찰액으로는 9월 이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며 "인상분을 보전 받기 위해 학교측과 협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28일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던 용역계약은 29일 또는 30일로 늦춰질 전망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와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원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6월 30일 (수)
제 26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테러방지법, 공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2. '제적'도 '전학'도 이해할 수 없어요!
3. 개인정보보호 보호 비상!
4. > 즐거운 물구나무 < 여전히 그들로 존재해온 '이라크인들'

테러방지법, 공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
뿐'

인권사회단체가 정치권에 테러방지법 입법시도를 '당장 걷어 치우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16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일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했느냐"며 김선일 씨 사망을 계기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은 "공지에 몰린 정부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현행법과 제도"만으로도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 처벌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김선일 씨의 사망은 "일선 관료들의 나태와 직무유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불구멍으로 몰고 가는 이라크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이미 '한국 정부가 중동·아랍권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고 모든 정보를 미국 혹은 서방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중동국의 지난해 예산이 9억5백 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전체 사업비의 0.17%에 불과한 불균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결과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라크에 대한 엉뚱한 판단만 내놓고 강대국에 굴종해 온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활동가는 "이미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국가기관에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두고 있다"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 차례 현재의 법과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정부나 국회는 성실한 답변이나 연구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활동가는 "사회 각계에서 지난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면서 반대해왔다"라며 "그런데 또 다시 국회와 정부가 상황논리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철회가 아닌 다른 모든 대책은 공허할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조속한 파병 철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7월 1일 민가협은 목요일집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적'도 '전학'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던 고등학생이 학교의 '제적' 위협 속에도 '전학'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던 서울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의 부모는 26일 신청했던 전학을 29일 취소한다고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학교측의 태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아름다운종교사랑'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진 강의석 학생의 글은 '제적' 아니

면 '진학'을 요구해온 학교측의 위협에 강의석 학생을 비롯해 강군 부모의 갈등과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공동체 나다 등 단체들이 29일 긴급히 회의를 열고 '강의석군 부당 징계 저지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종교의자유 연대회의)'를 꾸리기로 했다. 종교의자유 연대회의는 오는 7월 1일 대광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의석 학생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학내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계속해서 학교의 부당한 징계가 있을 경우 헌법 소원, 교육청 민원, 징계 처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기사 처음으로>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집적해 전산화하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R 시스템은 환자 개인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병력과 같은 환자의 '의료 정보'까지 전산화해서 집적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록이 전산화된다. 지난해 6월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 사용해왔지만 서울대병원측은 이 시스템이 일으킬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무시한 채 '진보된 형태의 디지털화'라고만 선전하고 있다.

EMR 시스템은 방대한 환자들의 정보를 집적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적 사항이나 병력, 치료 과정, 투입 약 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들이 단일한 시스템으로 모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로 정보가 손실되거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적된 방대한 국민의 의료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이러한 정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린 격'.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시스템에 대한 바이러스 침투는 흔각을 다루는 환자들의 진료와 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특정 의료인으로 한정되어야 할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이 기술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전자서명 카드를 이용한 전자서명 시스템은 EMR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전자서명 시스템의 핫점을 이용,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서울대병원노조 최선임 지도위원은 "EMR 시스템 도입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건강관련 정보는 보험회사 등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의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 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이 시스템은 사람을 신체 조건에 따라 우등인간과 열등인간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21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인용병실 확대 및 병실료 인하 △은전한 주5일제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EMR 도입에 대한 문제 해결 등을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여전히 그들로 존재해온 이라크인들

"친구들은 특전사를 보내자고 하던데요" 과외를 가르치던 중, 아이가 말한다.

"민간인을 죽인 거잖아요... 이라크에 있는 테러집단 쏘어버리자고..."

"그 친구들은 그럼 미군이 이라크 민간인들을 계속 죽일 땐 특전사를 보내자는 말 왜 안 했더니?" 라고 내가 물었다. 아이는 답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막상 그 말을 뱉어놓은 내 자신도, 과연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막막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라크인 만 여명의 학살,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고문 소식에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갔지만 그 뿐. 어느 때처럼 다시 일상으로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그 뉴스는 세계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가슴 아픈 소식 중의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김선일 씨가 피살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던 새벽 무렵부터 사람들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술렁거렸다. 학살당한 이라크 시민들에 대한 애도에는 비할 수 없는 거친 분노의 물결은 거리로, 인터넷으로 쏟아져 나왔다.

'만여 명'이라는 생명력 없는 숫자는, 그리고 '이라크'라는 국가의 이름은, 1년 여 동안 학살당한 그들을 '타자'라고 규정했다. 우리가 미국반대, 부시반대, 전쟁반대, 파병반대 등 온통 벌어진 상황만을 반대할 뿐, 적극적으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니 넘지 않았던 것은 이라크인에 대한 타자와 된 시선 때문은 아니었을까. 결국 그들에 대한 감정, 의지와 행동은 '우리' 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던 것이다.

비겁한 테두리를 둘러친 우리는 그들의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 명의 그들'에게 일어난 슬픔과 분노, '내 곁의 당신'에게 일어난 슬픔과 분노에는 잔인하고 비겁한 경계지음이 있었다. 결국 이런 우리들이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생명이란 얼마나 소중한가.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명, 가족의 생명 그리고 내 이웃, 내 나라 국민의 생명과 그 외의 '생명'을 정말 평등하고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었던가. 이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